

研究論文

단기 연호, 개천절 국경일, 홍익인간 교육이념*
- 현대 한국에서의 단군민족주의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정 영 훈**

I. 머리말	V. 단군민족주의의 제도화와 그 이후
II. 단기 연호의 유래와 제도화 과정	VI. 맺음말
III. 개천절의 유래와 제도화 과정	<참고문헌>
IV.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와 제도화 과정	<국문요약>

I. 머리말

이 논문은 단기 연호와 개천절 국경일 및 홍익인간 교육이념의 역사적 유래를 살피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제도의례 속에 편입되는 과정과 의의를 단군민족주의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단기 연호나 개천절 국경일, 그리고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모두 단군신화와 관련되어 있다. 단기는 단군이 건국한 해로부터 기산하는 연기법으로,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라 단군의 건국시기를 서기전 2333년으로 보아 년도를 계산하는 전통이 있어오다가 정부수립 후 공식연호로 채택되었다. 개천절은 단군(환웅)이 천상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우리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하늘을 연’ 일에 비유하여 기념하는 것으로, 양력 10월 3일로 고정하여 국경일로 법제화하였다. 홍익인간은 환인이 인간세상과 관련하여 갖고 있던 관념이었는데,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행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한국정치사상 전공(aksjeong@aks.ac.kr).

일제기를 통하여 고유의 정치이념 또는 윤리사상으로 주목되어 오다가 정부수립 후 교육법 속에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단군신화에서 기인되는 상징의례들이 국가의 제도 속에 자리 잡게 된 배후에는 단군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사상조류가 자리하고 있다. 단군민족주의는 단군을 민족사의 공동연원이라 간주하고 단군의 자손으로의 정체성에 토대하여 민족적 결속과 자주독립 및 발전을 추구하던 일련의 의식·사상 또는 실천운동을 가리키는 말이다.¹⁾ 단군을 한국사(동국사)의 시작으로 생각한 전통은 『삼국유사』(1281)와 『제왕운기』(1287)까지만 소급하더라도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제왕운기』에서는 신라·고구려·부여·옥저·예맥 등 고대사 속의 여러 나라들을 단군의 자손이라 명기함으로써 단군을 민족사의 공동의 연원으로 보는 관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후 조선조를 통해서는 사대모화사상이 지식계를 지배하는 가운데 동국사의 독자적 출발을 상징하는 단군이 일정하게 위축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각종 관찬·사찬의 사서들은 동국사의 첫머리를 단군으로부터 시작하는 데 예외가 없었다. 그런 배경 속에서 ‘東方始受命之主’나 ‘東方始祖’·‘朝鮮始祖’로 지칭된²⁾ 단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제례나 유적 보존사업이 전개되었고, 그런 전통은 다시 ‘檀君生我靑丘衆’이라거나 ‘東方生民之鼻祖’·‘檀君民鼻祖’라 하면서³⁾ 단군을 민족전체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인식으로까지 심화되어 갔다.

그런데 단군을 민족사의 기점으로 간주하고 한민족 모두를 단군의 자손으로 생각하는 사고는, 단순히 민족적 정체성이나 자긍심만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1) 단군민족주의라는 말은 기왕에도 사회사상사나 사학사 분야의 몇몇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었는데,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명확한 개념규정에 토대해서 한국사를 설명하는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필자였다 할 수 있다. 좀더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정영훈, 「단군민족주의와 그 정치사상적 성격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1993); 정영훈, 「단군과 근대한국 민족운동」, 『한국의 정치와 경제』, 8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정영훈, 「단군민족주의의 前史」, 『단군학연구』, 8집(2003); 정영훈, 「민족통일운동과 단군민족주의」, 『단군학연구』, 11호(2004); 정영훈, 「한국사 속에서의 단군민족주의와 그 의의」, 윤내현(외), 『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지식산업사, 2005).

2)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庚申;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6월 己未;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7월 戊辰.

3) 남효온, 『추강집』, 권3 「謁檀君廟庭」; 홍만중, 『甸五志』, 卷上; 김시습, 『매월당집』, 권9 「遊關西錄」.

민족적 자주독립과 공동운명체적 결속 및 그 같은 공동의 과제에 대한 성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데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단군이 가지는 이 같은 실천적 의의가 인식되면서 단군민족주의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보급하는 활동도 전개 되는데, 가령 한말·일제침략기에 발전한 민족주의사학을 비롯한 국학운동이나 대중교 등 단군신앙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이들의 계몽에 힘입어, 그리고 민족주의를 요구하는 시대상황과 결합하면서 단군민족주의는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된다. 단기 연호나 개천절 국경일, 홍익인간 교육이념 등은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는 국가의 제도의례 속에 영입되어 자리 잡게 된다. 이들 단군신화에서 유래하는 상징장치들이 국가의 제도 속에 자리 잡는 것은 단군민족주의운동의 주요 성과라 꼽을 수 있으며, 단군민족주의의 제도화라는 차원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단군민족주의가 제도화하는 과정과 이후의 변화추이를 더듬는 것은 한국의 정치사와 정치사의 추이를 살피는 준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민족주의의 발전과정과 민족주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며, 특히 한국사 속에 존재하면서 주요국면에 관여해온 단군민족주의 흐름의 추이를 살피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 집필되었다. 논문에서는 이들 각각의 유래와 제도화 과정을 정리하고 그의 배경과 의의를 단군민족주의와의 관련 속에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II. 단기 연호의 유래와 제도화 과정

단군민족주의의 전통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가장 먼저 제도 속에 정착한 것은 檀紀 年號이다. 단기는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시간을 기산하는 年紀法으로의 ‘단군건국기원’의 줄임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호는 天子를 자처하는 覇者가 천명을 계승한 존재로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내부를 통합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정하며, 제3자가 그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편의상의 용도를 넘어 그 천자의 통치권을 수용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중원(중국)을 장악한 제국이 천하의 주인이자 중심임을 자처하며 그 우세한 문화력과

군사력으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 위에 군림하던 고대와 중세에 있어서는, 어떤 연호를 사용하는지의 문제가 국가적·민족적 자주의식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자적인 연호를 표방한다는 것은 자신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천명을 받은 자주적인 지위에 있는 존재이며 중국과도 대등한 관계임을 천명하는 행위이다. 거꾸로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는데 동의하고 제후국으로의 지위를 수용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였다.⁴⁾

한국사를 통해서 보면 중국의 연호를 따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할 수 있다.⁵⁾ 그런 현상은 사대모화사상과 유교적 명분론이 우세하던 시기에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거기에는 자신을 독자적 중심이 아닌 주변적 존재로 생각하는 소극적 정체인식이 인식이 수반되어 있었다. 조선 왕조는 중국에 대한 사대를 대외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출발하였으므로 명과 청의 연호를 사용해왔다. 그러다가 한말에 와서 개화사상의 보급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등하며 자주적인 구성원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이 자각되면서 독자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개국기원(1894)이나 建陽(1886)·光武(1897 대한제국)·隆熙(1907, 순종) 등이 그것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왕권국가 차원의 독자성을 천명한 것이지 민족적 차원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 왕권국가 차원의 연호가 아니라, 민족적 차원의 정체성인식을 반영하여 대두된 연호가 바로 단기이다.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기산하는 ‘조선건국 ○년,’ ‘단군개국 ○년’ 또는 ‘단군기원 ○년’ 식의 연기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경부터이다. 《황성신문》은 판형을 개량한 1905년 4월 1일자(1905호)부터 ‘단군개국’ 연기를

-
- 4) 연호가 가지는 정치적 의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양승태, 「연호와 국가정체성: 단기연호 문제의 해명을 위한 정치철학적 논구」,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2001)을 참조할 것.
- 5) 연호는 漢武帝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사에서는 사대모화사상과 중국의 영향 하에 중국의 연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은데, 고구려 광개토태왕은 永樂이나 建興 같은 연호를 사용하였고, 신라도 법흥왕 때(536)부터 진흥왕·진평왕·선덕여왕·진덕여왕 때까지는 建元·開國·建福·仁平·太和 등의 독자연호를 사용하다가 진덕왕 때(650)부터 당의 연호를 따라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헌덕왕때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長安國이라는 국호에 慶元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한 기록이 보인다. 후삼국의 궁예도 麻震·泰封 등의 국호와 함께 武泰·聖冊 같은 독자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고려 태조나 광종도 天授나 光德 같은 독자적 연호를 쓰기도 하였다.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도 大爲라는 국호에 天開라는 연호를 내세웠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민족문화대백과사전(15)』(1990), 15권, 「연호」항 참조.

기자원년·대한개국·광무·서기·음력·일본명치·중국광서와 함께 병기하고 있는데, 이같은 연기방식은 《대한매일신보》(1905.8.11)나 《만세보》·《경남일보》·《예수교회보》·《공립신보》·《신한민보》 등 국내외에서 발간되던 다른 신문들도 따르고 있다. 이후에는 단군기원만으로 연대를 적는 방식이 점차 보급되었다.⁶⁾

단기 연호를 써야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인물이 신채호인데, 그는 한말에 쓴 한 논설에서 조선의 역사가 단군에서 시작되었음을 지적한 뒤, ‘我建國聖祖檀君’에서 시작하는 기원을 사용하면 역사를 대함에 있어 ‘同祖同族’의 관념이 생겨나 애국심을 환기시키는데 유익하리라 주장하며 단기 연호사용을 역설하였다.⁷⁾ 신채호의 애국계몽운동과 역사연구는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고 그를 통해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한 데에 실천적 목적이 있었다 할 수 있는데, 단기사용에 대한 그의 주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단기는 조선왕조가 문을 닫은 이후 왕실차원의 융희 연호를 대체하면서 급속히 확산되게 되는데, 삼일운동 무렵으로 오면 발표된 독립선언서들이 그 발표일을 대개 단기를 사용하여 적게 된다. 이는 선언서들이 쉼기의 주체이자 자주독립의 주체를 ‘반만년 역사’를 가진 ‘단군배달겨레’라 표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⁸⁾ 단기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집단적 정체성을 단군의 자

6) 한 예로 1907년 ‘大韓帝國倡義士 金鳳基’ 명의로 발표된 의병 격문들은 ‘단군사천이백사십년 칠월 삼일’을 포고일로 적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근현대사자료총서8』(선인, 2000), 12, 27, 183, 194, 224, 235쪽 참조.

7) 「역사에 관한 管見二則」, 《대한매일신보》, 1908.6.17, 단재신채호전집편집위원회(편), 『단재신채호전집(6)』(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421쪽. 1908년에 집필된 「독사신문」에서는 오늘날의 국가는 일개 성씨의 국가가 아니라 ‘萬民의 公産’이므로, 연대를 적을 때도 군주별로 정한 연호를 쓸 것이 아니라 국조 또는 교조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논리로 단기사용을 촉구하고 있고, 「대동제국사서언」에서도 임금마다 따로 설정한 기원을 사용하면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大東歷史의 출발점인 단군건국으로부터 시작하는 ‘神祖建國의 紀元’을 사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단재신채호전집편집위원회(편), 『단재신채호전집(3)』, 349쪽.

8) 중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는 1918~1920년 사이에 국내외 각지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 성격의 선언문들을 16종 찾아낸 바 있는데 『한국학』, 28집(중앙대 한국학연구소, 1983)], 그중의 7종이 朝鮮建國·檀君開國·紀元 등의 단기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임정수립 이후에 발표된 성명서들 중에는 (4종) 임시정부 지지를 표명하는 의미에서 ‘大韓民國紀元’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기타 서기를 사용한 선언서도 일부 (2종) 있는데, (3종은 불명) 그러나 단기를 사용하지 않은 선언문들도 거의 대부분이 ‘반만년 역사’나 ‘사천삼백년의 장구한 역사’·‘檀君麗族’·‘神聖民族’ 같은 표현들을 구사하고 있어 ‘단군민족주의’적 정체성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삼일운동에서 표출

손으로 인식하고 있고, 거사의 의미 또한 단군 이래 반만년 민족사의 호흡 속에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단기의 확산경향은 일체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이 심화되고 사회주의자들의 계급주의적 세계관이 확대됨에 따라 일정하게 제약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체가 패망하고 민족의식의 분출을 억압하던 식민권력이 사라지자 단기는 곧바로 전면으로 부활하게 된다. 해방 후 복간된 신문과 잡지들은 대거 단기를 이용하여 발간일을 표기하였고, 미군정하에서는 호적을 단기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⁹⁾ 5·10선거로 개원한 제헌국회는 헌법전문에 그 공포일을 ‘단기 4281년 7월 20일’이라 표기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단기연호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단기는 한달여의 심의과정 끝에 「연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호, 1948.9.25)이 공포됨으로써 정부의 ‘공용연호’로 지정되게 된다.¹⁰⁾

이때 단기 연호의 산정방식은 서기연도에 2333년을 더하는 방식이었다. 이같은 관례는 한말 이래 정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단기의 기준이 되는 단군의 건국시기에 대해서는 문헌기록마다 다소간씩 차이가 있다. 단군건국에 대해 전하는 문헌들에서는 단군의 건국시기를 중국 요임금의 즉위시기와 비교하면서 적고 있는데, 그 유형은 대개 (1) ‘與高同時’ 곧 요임금과 같은 때 즉위했다고 기록한 경우와, (2) ‘唐堯25年戊辰’ 곧 요임금 25년 무진년으로 기록한 경우, (3) ‘唐堯戊

되고 영향 끼친 단군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9) 미군정기에 이미 단기를 사용하여 호적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은 정부수립 후 국회에서 공용연호를 단기로 정할 때 단기 사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논거의 하나로 제기되었다. 해방 후 호적 등 공공서류가 이미 단기로 정정되어 왔는데, 이를 다시 단기 이외의 다른 연호로 바꾼다면 재정상 낭비가 조성된다는 논리였다. 제헌국회에서의 「연호문제에 관한 건」 심의시 황두연 의원의 발언 참조. 『제1회 국회속기록』 제60호, 1948.9.8(<http://likms.assembly.go.kr>).
- 10) 제헌국회는 개원 때부터 단기를 사용하였지만, 그러나 뒤에 조직된 이승만 정부는 1919년 임정수립에서 기산하는 ‘대한민국30년’을 사용하였고, 뒤이어 취임한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서기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연호를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어떤 연호를 사용할지를 두고 전개된 국회에서의 논쟁은 주로 ‘단기’와 1919년 임정수립에서 기원하는 ‘대한민국’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두고 전개되었는데, 결론은 단기 연호가 채택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심의과정에서는 학계와 언론계 지도층에 대한 의견청취도 거쳤으며, 최종적인 찬반표결(1948.9.12) 때는 재석 133인 중 찬성이 106인이고 반대가 5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국회논의 과정은 서영대(편), 「단군관계자료」, 서울대종교문제연구소(편), 『단군, 그 이해와 자료』(서울대출판부, 1994), 608~634쪽을 참조할 것.

辰歲', 곧 요임금 때인 무진년이라고만 표기하는 경우, (4) 요임금 50년 庚寅으로 적은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¹¹⁾ 단군의 건국연대에 대해 이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은, 단군관련 전승이 다양했고, 연대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당요의 즉위년에 대한 이론이 서로 달랐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조선조의 문헌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지는 인식은 요임금 25년 무진이라는 견해이다. 이는 조선조 최초의 관찬사서인 『동국통감』의 기술을 계승한 것으로, 요임금의 즉위년(당요원년)을 갑진년으로 보고, 그 25년인 무진년을 단군의 건국년으로 보는 것이다. 한말에 와서 대중화된 단기도 이 같은 관례를 따르고 있는데, 요의 즉위년인 상원갑자 갑진년을 서기전 2357년으로 보아, 그 25년 무진년은 서기전 2333년이라 고증되고 있다. 이 같은 산정방식이 한말 일제기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었으며,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채택한 단기 역시 이를 따르고 있었다.¹²⁾

단군을 동국사의 기원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특정의 사건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11) 각각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삼국유사』 고조선기가 인용하는 「위서」에서는 ‘與高同時’라 표현하고 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與堯同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권근의 「응제시」에서 ‘唐堯元年戊辰’이라고 하여 그 동시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동국통감』(1484)에서 ‘唐堯戊辰’설을 수용하면서도 무진년은 당요의 25년이라하여 ‘與堯竝立’설을 비판하고 ‘唐堯二十五年戊辰’설을 고증한 이래 본격화한 견해로서, 『동국사략』 등 조선조 사서와 문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 되었다. (3) 『제왕운기』, 「동국군왕개국년대」에서는 ‘唐堯戊辰歲’라 기술하고 있으며, 조선 『태종실록』 속의 변계량 상소문,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조의 기사 등에서도 같은 서술을 보이고 있다. (4) 『삼국유사』 고조선기가 인용한 「고기」에는 요임금 50년 庚寅으로 적고있는데, 『단종실록』 등에도 보이지만, 사례가 많지는 않다 할 수 있다. 서영대(편), 앞의 자료; 김성환, 「고려시대단군인식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2001) 등 참조

12) 단군의 고조선이 성립한 실제 시기에 대해서는, 서기전 24세기 건국설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청동기문화 시작시기를 계속해서 올려 잡고 있는 추세 속에, 단군조선의 서기전 24세기 건국이 고고학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형국인 것 같다. 최근 남한 내 고고학자들은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를 서기전 16~7세기까지 소급하고 있으며, 고조선의 실제무대라 여겨지는 만주 요서지역의 경우에는 서기전 25세기 이전에 (하가점하층문화) 청동기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1993년 「단군릉발굴보고」를 내놓으면서 대동강지역에는 이미 서기전 30세기에 청동기문화가 시작되었고, 그에 토대하여 단군조선이 건립되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단기 연호는 물론 실재한 역사가 아닌 기록된 역사에 토대하여 출발하고 있다. 단군이 ‘여고동사’에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은 전통시대를 통해서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왔으며, 그를 회의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식민사학의 영향 속에 실증학문으로의 역사학이 주창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인식함에 있어 그 의미를 단군이 건국한 동국사의 흐름 속에서 생각하게 하고 단군이 건국한 후 얼마나 지난 시점의 일인지 따져보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단군의 건국을 기점삼아 역사를 논의한 사례 중 가장 오래된 현존 기록은, 고려 충렬왕 때 쓰여진 『제왕운기』(1287) 「동국군왕개국년대」 속의 「신라기」의 기술이 아닌가 한다. 이승휴는 거기에서 신라의 경순왕(김부)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한 해(태조18, 935)를 설명하면서 단군원년 무진으로부터 이때까지 무릇 3288년이라 부연하고 있는 것이다.¹³⁾ 고려 공민왕 때 백문보가 왕에게 상소한 내용 속에도 단군으로부터 기산하여 시대를 설명한 대목이 보이는데, 백문보는 당시의 시대를 단군이 건국한지 3600년이 되는 대주원의 해라 말하며 국가의 분위기를 일신할 것을 청하고 있다.¹⁴⁾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동국사에 대한 강조는 유교적 사대모화사상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연결되며, 국가적·민족적 자주의식과 자긍심으로 나아간다. 국가차원에서 제천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의 존치문제를 두고 논쟁이 전개되다가 임란 후 폐지되기까지의 과정은, 조선조의 지식계가 사대모화사상과 유교적 명분론에 침닉돼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거니와, 이때 체후국인 조선으로서는 제천할 자격이 없으니 소격서는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서 그의 존치를 주장한 입장의 논거는 조선은 중국의 책봉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단군이 직접 내려와(천명을 받고) 건국한 나라라는 데서 찾아졌었다.¹⁵⁾ 한국 정신사를 통하여 보면 이 같은 단군기원의식을 보다 강하게 갖고 있던 흐름이 仙家였는데,¹⁶⁾ 이들의 단군민족주의적 의식은 한말로 넘어오면서 대중화되며 민족적 각성을 주도한다. 그 한

13) “金傅大王能遠計 後唐末帝清泰二 乙未仲冬朝我陞 (我太祖十八年也 自檀君元年戊辰 至此凡三千二百八十八年).” 참고로 이 같은 계산에 의하면 단군의 건국년도는 서기전 2353년이 된다.

14) 『고려사』, 「열전」 권112 백문보전, “天數循環 周而復始 七百年爲一小元 積三千六百年 爲一大周元 此皇帝王霸 理亂興衰之期 吾東方 自檀君至今 已三千六百年 乃爲周元之會 宜遵堯舜六經之道 不行功利禍福之說 如是則 上天純祐 陰陽順時 國祚延長.”

15) 『태종실록』 권31, 16년 6월 신유. “吾東方檀君始祖也 蓋自天而降焉 非天子分封之地也.”

16) 학계에서는 우리 정신사·사학사를 통하여 단군에 관련된 인식·기록을 전승해온 주역은 유가나 불가가 아닌 仙家라고 보고 있다. 이 선가는 자신의 문화적·종족적 연원을 환인·환웅·단군이래의 東夷적인 것에서 찾으면서 신선사상에 토대하여 유교·불교 등 외래 종교에 대해 대결의식을 견지하고 있던 일련의 사상·문화적 흐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선가의 영향 하에 저술된 대표적인 사서가 『규원사화』(1675)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훈, 「규원사화에 나타난 민족의식」, 『정신문화연구』, 39호(1990) 참조.

양상이 단기연호 사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말에 와서 단기사용이 대중화되는 것은 앞 시기의 이 같은 경향과 전통들이 강화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단기 연호는 공용연호로 제정된 지 13년 만에 폐지되고 서기로 대체되게 된다. 5·16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는, 단기 연호가 외교 및 행정에 많은 애로와 낭비를 결과하고 있는 데다,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와 대부분의 선진제국에서는 서기연호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결정으로 단기를 서기로 교체하게 된다. 단기를 서기로 바꾸는 새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서」에서는, 대내문서가 단기를 쓰는데 대해 대외문서는 서기를 사용하여 서로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있고, 서기를 단기로 바꾸는데 불필요한 낭비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국수주의적이고 국제협력에 등한한 듯한 인상을 주기 쉽다는 점 등을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¹⁷⁾

군사정부가 연호를 변경을 급하게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쿠데타 주도세력이 친미·친서방의 노선 하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하려한 사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5·16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은 ‘조국근대화’를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의 구호로 제시하였으며, 반공·친미·친서방의 노선에서 대외적 지지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근대화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과시하고 미국과 서방제국으로 하여금 혁명정권의 친미·친서방 성향을 확인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연호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군사정부의 단기폐기 결정이 국민의 여론수렴을 거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시 상황이 군부가 삼권을 장악한 억압 상황이었던 만큼 일반의 반대나 저항은 별반 없었던 것 같다. 일부 신문들이 연호 문제가 ‘경박하게 처리된 것’을 비판하였지만¹⁸⁾ 물리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사정부의 조치를 번복시키기에는 무력한 것이었다. 이후 단기 연호 부활을 촉구하는 시민운동 차원의 요구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서기를 다시 단기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17) 1961년 11월 16일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연호에 관한 법률안」에 첨부된 ‘제안이유서’; 양승태, 「단기 연호와 통일」, 『한국정치학회보』, 41집 2호(2007) 참조.

18) 《조선일보》, 1961.11.12 사설.

III. 개천절의 유래와 제도화 과정

단군민족주의가 국가의례 속에 정착한 사례 중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에 국경일 개천절이 있다. 개천절 역시 단군 건국신화에서 유래한다. 단군신화에 의하면 天帝 환인이 갖고 있던 홍익인간 이념에 따라 그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神市를 건설하고, 환웅의 아들 단군이 조선을 건국함으로써 민족사(동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開天(하늘이 열림)이라 함은 최초의 인간공동체인 신시를 열고, 첫 국가 고조선을 건설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테면 민족의 탄생이나 민족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라 하겠다.

그런데 단군(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신시를 연 날과 조선을 건국한 날짜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조선왕조 이래의 (또는 그 이전부터의) 단군관련 제례나 민간신앙 속에 그 같은 전승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우선, 조선 초기 이래로 평양의 단군묘와 단군사, 구월산의 삼성사, 그리고 강화도의 마니산(참성단) 등에서 행해진 국가차원의 제례나 풍습에 대해 언급하는 문헌기록들이 그 제사시기를 봄·가을이라 언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사시기로 언급한 봄·가을은 뒷날 단군신앙 관련 제례일로 지켜진 3월 15일(어천절, 단군이 승천한 날)과 10월 3일(개천절, 단군이 강림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들은 또 그 같은 제례가 고려 시대의 옛 관례에 입각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점은 10월 3일에 대한 전승이 조선조 이전부터 있었을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¹⁹⁾

19) 가령 세종 7년에 정척이 왕에게 단군을 치제하는 독립된 사당을 지을 것을 건의하는 상소내용에는, 그 동안에는 檀君廟를 기자묘에 부설하여 봄·가을에 제사지내 왔다는 내용이 보이며[『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9월 辛酉], 지리지의 기사 속에는 세종 11년에 따로 檀君祠를 설치하여 봄·가을마다 치제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세종실록』, 지리지 권162, 평양부]. 『성종실록』에는 예조가 왕에게 구월산 三聖祠에도 평양의 단군묘의 예에 따라 봄·가을로 제사지낼 것을 건의하였는데, 왕이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나온다[『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임신]. 또 『세종실록』 지리지의 강화도호부조 마리산 항에는, 산꼭대기에 조선단군이 하늘에 제사지냈다는 참성단이 있고 산기슭에 채궁이 있는데, 舊例에는 매년 봄·가을에 조정에서 대언(代言)을 보내어 초제를 지냈고, 세종 12년에는 2품 이상 관리를 보냈다는 내용이 나온다[『세종실록』 지리지, 권148, 강화도호부. “摩利山 在府南 山頂有璽星壇·世傳朝鮮檀君祭天石壇 山麓有齋宮 舊例每春秋 遣代言設醮 今上十二年庚戌 始遣二品以上”]. 이형상이 쓴 『江都志』(1696) 祠壇 참성단항에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옛날 고려가 하던 대로 참성단에서 봄과 가을에 소격서의 주관 하에 초제를 지냈다는 내용

국가가 시행하던 단군관련 제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민간의 신앙에 대해 전하는 문헌에서는 10월 3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시되기도 하였다. 우선 19세기의 문헌인 『무당내력』에는 “상원갑자 10월 3일에 神人 단군이 태백산에 내려와 신교를 세우고(設神敎) 백성을 가르쳤다”는 얘기와, 단군이 매년 10월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근본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무녀를 시켜 치성들이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²⁰⁾ 이 책은 무당과 무속의 연원을 단군으로까지 소급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간신앙 속에 10월 3일에 대한 전승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동학운동(1894) 무렵에 평안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김염백의 단군신교 교단도 10월 3일과 3월 15일을 단군의 탄생일과 仙去日로 정하여 제례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점 역시 단군관련 민간신앙 속에 10월 3일에 대한 전승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²¹⁾

1904년에 백두산지역에서 활동하던 백봉 중심의 단군교단에서 발표한 「단군교 포명서」에서도 10월 3일을 ‘檀君開極立道之慶節’한 날, 곧 단군이 나라를 열고 가르침을 세운 경축일로 거론하고 있다. 「단군교포명서」는 나철이 백봉으로부터 단군교 보급을 권유받으면서 받은 경전류 중의 하나로서, 「포명서」에 의하면 1904년 10월 3일에 백두산에서 白峯神師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고유종교인 단군교가 포명되었다 한다.²²⁾ 포명서에서는 단군교의 역사와 의의를 말하면서 고유종교인 단군

이 나온다. 『국역 瓶窩集』(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274쪽.

20) 서울대규장각(편), 『무당내력』(영인본, 1996), 41, 49쪽. 서문에 上元甲子(唐堯時) 十月三日 神人降于太白山(白頭山 或云 妙香山) 檀木下 是爲檀君 乃設神敎而敎之 長子扶婁 賢而多福 故人民尊信 後日擇地等壇 土器盛禾穀 編草掩之 曰扶婁檀地(業主嘉利) 每歲十月 新穀既登 以飶餅酒果 致誠祈禱라는 내용이 있으며, 「成造巨里」를 설명하는 부분에 檀君時 每歲十月 使巫女 祝成造家之 意 人民不忘其本 致誠時依例舉行耳라는 내용이 있다. 『무당내력』에서는 무속제례의 유래와 내용을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무당(무속)이 단군시대에 단군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10월에 개최되어 온 고대이래의 제천행사들을 단군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단군 이래 개최되어온 행사로 서술하기도 하였다. 이 『무당내력』은 乙酉仲春에 簡谷이라는 호를 가진 이가 쓴 것으로 나오는데, 학계에서는 이 을유년을 1825년이나 1885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21) 김염백의 단군교단에 대해서는 이강오, 「단군신앙총론」, 『전북대학교논문집』, 제10집(1968), 30~32쪽; 村山智順(저)/최길성(역), 『조선의 유사종교』(계명대출판부, 1991), 354쪽 참조. 村山の 책에서는 1893년경 김염백에게 신교를 배운 한명윤이라는 사람이 1899년부터 포교를 시작한 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10월 3일과 3월 15일에 교도를 모아 예배를 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22) 포명서에서는 그 발표일을 ‘檀君開極立道 四千二百三十七年 卽大韓光武八年 甲辰 十月初三日’로 적고 있다. 4237년은 단기 1904년에 해당하며, 포명서에 의하면 통상 단군의 개국년도로 알려진

교가 활성화되어야만 민족의 번영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전개하는데, 나철은 이 백봉의 단군교로부터 포교를 촉탁 받아 1909년 초부터 본격적인 종교활동을 시작하였고 다음해에 대종교로 교명을 바꾼다.

10월 3일의 기념일에 개천절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대종교가 처음인 것 같다. 대종교는 단군의 강림과 건국을 민족사의 출발로 보는 단군민족주의의 인식과, 전래의 삼신신앙류의 민간종교사상을 결합시킨 교리내용을 가지고 포교를 시작하였는데, 사대모화사상 속에 망실된 단군이래의 고유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출발을 창교 아닌 重光이라 표현했었다. 대종교는 창립 후 교단의 의례를 정하면서 10월 3일을 ‘개천경절’이라는 이름하에, 단군의 仙去日인 御天節(3월 15일)과 함께, 두 개의 大祭 중 하나로 정했었다. 이 개천경절이라는 이름은 대종교로 이름을 바꾼 후인 1910년 9월에 敎命으로 儀式規例를 개정하여 발표할 때 다시 개천절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된다. 대종교에 의하면 단군의 강세일과 개국일이 모두 10월 3일이므로 둘을 개천절이라는 이름으로 합칭한 것이라 한다.²³⁾

대종교의 창립 이후 10월 3일이 단군의 탄강·강세일이자 건국일이라는 인식은 더욱 확산되었고, 그 기념행사도 더 활기를 띠었다. 10월 3일을 기념하는 행사는 국권을 상실한 뒤에도 국내외에서 계속되었으며, 종교와 관계없이 민족의 제전으로 인식되어 왔다.²⁴⁾ 상해 임시정부(1919)도 발족한 첫해부터 국무원 주최로 음력 10월 3일에 「大皇祖聖誕 及 建國紀元節 祝賀式」을 거행하였다.²⁵⁾ 개천절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독립운동의 대표기관을 자처한 임시

서기전 2333년을 단군의 開極立道한 해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開極의 의미를 개국이 아닌 단군의 탄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 23) 대종교총본사, 『대종교중광60년사』(1971), 99, 160쪽 참조. 그러나 대종교에서 개천이라는 말은 단군의 건국보다는 강세에 초점 맞춘 것이었다[김교현, 『신단실기』(한뿌리, 1987), 12쪽 참조]. 대종교는 단군의 강세일(개천)은 개국일보다 124년이 앞선 시기라 보며, 단군의 강세에서 기산하는 개천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또 기념행사도 음력을 고수하고 있다. 한말의 자료에서는 개천절을 단군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사례도 있는데, 가령 최남선이 발행하던 잡지 《소년》지 1909년 10월호(2년 10권) 권두에서는 ‘檀君節’이라는 곡명의 노래를 게재하고 있다.
- 24)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삼균주의연구논집』, 9집(1987), 26쪽. 개천절 경축행사를 주최한 주체가 대종교단이 아닌 경우도 자주 찾아지는데, 서영대교수가 수집한 일제하의 개천절 관련 언론기사 중에도 여러 건이 소개되고 있다. 서영대, 앞의 자료, 567~595쪽 참조
- 25) 《독립신문》, 대한민국원년 11월 27일자.

정부가 10월 3일을 대항조성탄절이자 건국기원절로 정하여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축하식을 거행한 것은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1920년대로 넘어오면 개천절이라는 이름이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개천절이 건국절 또는 건국기원절보다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된 데는, 개천이라는 말이 더욱 의미심장하고 함축한 바가 크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단군에 의한 건국이라는 사건만이 아니라 민족과 고유문화전통의 시작이라는 사건을 모두 포괄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는 말로 개천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일제하의 언론도 개천절이라는 이름하에 그 기념행사들을 보도하고 있으며, 대중교리는 특정 종교를 넘어 민족적 기념일로 자리매김해갔다. 개천절무렵이 되면 각종 언론들이 개천절의 유래와 의의에 대해 계몽하는 기명·무기명의 논설을 게재하여 일반의 인식제고를 선도하였다.

개천절 관련 논설을 자주 발표한 사람은 최남선과 안재홍, 정인보 같은 국학자들이었다. 이들은 단군건국의 역사를 연구하여 개천절의 역사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일방, 개천절이 가지는 민족적 의의를 강조하여 계몽하였다. 이들은 개천의 의미를 天門天道가 인간을 향하여 開張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26) 報本反始·祭天祀祖하던 고대이래의 ‘全東方的 大民俗’에서 개천절이 유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개천절이 고대의 제천행사 풍습이나 민간의 추수감사축제풍습 등과 연결된 것으로 본다. 또 민간에서 수확의 계절인 10월을 상달(上月)이라 하여 중시해왔고, 3이라는 숫자를 길한 수(吉數)로 여겨 신성시해온 전통 등도 개천절의 유래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았다. 27) 이들에 의해 개천절은 조선국의 탄생일이자 조선 인문의 정초일로, 또는 조선국과 조선민족의 생활과 문화의 탄생일이요 그 민족이상의 발단일이라 의미 부여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조선인의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한 기념일에 그치지 않고, “光明理世의 민족적 대사명(조선심)을 매년 한번씩 가다듬으라고 마련하여놓은 날”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28)

개천절행사는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주독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었기

26) 「개천절」, 《동아일보》, 1928.11.14; 서영대(편), 앞의 자료, 585쪽.

27) 가령 「개천절: 조선心鏡의 重磨日」, 《동아일보》, 1925.11.18; 「개천절: 全民의 명절」, 《동아일보》, 1926.11.7; 「개천절」, 《신생》, 2호(1928.11); 서영대(편), 앞의 자료, 567~605쪽 참조.

28) 「개천절: 조선心鏡의 重磨日」, 《동아일보》, 1925.11.18; 서영대, 앞의 자료, 572~575쪽.

때문에 당연히 일제 식민당국의 탄압대상이 되었다. 일제의 동원수탈정책과 민족 말살책동이 심화되던 만주사변 후에는 탄압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내에서는 행사개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갔고 관련 보도도 언론에서 사라지게 된다.²⁹⁾

개천절은 해방 후 대한민국 국회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을 제정할 때 ‘국가에 경사로운 날’ 4일 중 하나로 지정됨으로써 정식 국경일이 되었다.³⁰⁾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는 이름하에 국경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반대여론이 거의 없었다 할 수 있다. 이는 단군민족주의를 국가적 통합기제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룬데다, 1920년대 이후 개천절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졌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다만 날짜에 대해서는 음력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약간의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그 상징적인 의미만을 존중하고 날짜는 보편화된 양력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채택되어, 양력 10월 3일로 최종 결정되게 된다.³¹⁾

이후 매년 개천절이 되면 가정과 관공서마다 국기를 게양하며,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경축행사가 개최된다.³²⁾ 1970년대 말까지는 지방행정기관과 학교 등에서도

29) 『동아일보백인』(동아일보사, 1970~1980)을 검색해보면, 개천절 관련기사는 1921년 11월 2일자에 대중교본사에서 개천절 경하식이 개최되는 것을 알리는 기사가 게재된 이래 매년 2~5건씩 실렸지만, 1932년 이후에는 1934년과 1935년에 각각 1건씩 게재된 것 외에는 폐간(1940)때까지 기사가 찾아지지 않는다.

30) 당시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3·1절, 광복절, 제헌절과 개천절 등 4개가 국경일로 제정되었었는데, 2007년에 한글날이 새롭게 국경일에 추가되었다. 삼일절이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여 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거족적으로 천명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광복절이 일제강점에서 해방(1945)되고 새 정부를 수립(1948)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제헌절이 새 국가의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 한글날이 한글창제 및 반포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개천절은 민족사의 출발을 경축하는 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

31) 개천절의 국경일제정과정에서의 국회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제5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3호, 제7호; 서영대(편), 앞의 자료, 638~646쪽 참조

32) 개천절 행사 때 불려지는 개천절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 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 / 이 나라 한아버님은 단군이시니. (2절)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 / 성인의 자취 따라 하늘이 텃다 / 이날이 시월 상달에 초사흘이니 / 이날이 시월 상달에 초사흘이니. (3절) 오래다 멀다 해도 즐기는 하나 / 다시 핀 단목잎이 삼천리 곱다 /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서하노니 /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서하노니. 『담원정인보전집』(1)(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81쪽. 경축식에서는 대통령 명의로 경축사를 통상 국무총리가 대독하며, 행사 전 과정은 방송을 통하여 중계된다. 식이 끝난 뒤에는 대개 전통예술을 주제로 한 기념공연이 이어진다.

개천절 기념행사를 따로 개최해왔는데, 최근에는 개별 기관 차원의 행사는 대개 생략되고 있고, 대신 민간차원의 행사들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개최된다. 특히 서울 사직공원 등 각 지방에 산재해있는 단군사당에서는 개천절마다 기념제례가 열리며, 마니산이나 태백산 정상에서는 천제가 봉행되기도 한다. 민간 차원의 기념행사는 양력이 아닌 음력 개천절에 열리기도 한다.³³⁾ 해외에서도 교민단체들의 주관 하에 개천절 기념식이 거행되기도 하며, 특히 재외 한국대사관에서는 각국 외교사절들을 초청하여 개천절 기념리셉션을 열고 있다.

최근 들어 특기할 사항은 북한에서도 개천절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이다. 종래 북한은 단군을 민족사의 기점으로 보고 기념하는 일을 부르주아적 유산이라 하여 배척해왔다. 그러나 1993년에 『단군릉발굴보고』를 내놓으며 단군이 실존인물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이래 입장이 전환되었다. 우리민족을 단군의 후손이라 강조하면서 단군민족단결론을 주창하는 일방 단군릉을 대대적으로 개건하는 등 단군에 대한 연구와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개천절도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10월 3일에 단군릉에서 해외동포까지 초청한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는 것이다.³⁴⁾

개천절에 대한 공격은 오히려 남쪽에서 강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을 앞세우는 탈민족주의 사상과 경제우선의 실용주의 사조가 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것 같다. 가령 개신교 보수집단이 단군숭앙을 민족정체성 및 동질성에 관련된 상징기제가 아닌 종교차원의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배척하고 있는 사례나,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주장 끝에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자주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개천절이 이제는 새로운 생존환경 속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그러나 反단군민족주의적·탈민족적 인식들이 확대되어가는 가운데서도 개천절이 가지는 의의를 중시하는 입장은 여전히, 개천절은 아직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³⁵⁾

33) 대종교에서는 고대의 제천행사를 복원했다는 禮儀式이라는 이름의 기념제례를 지낸다. 경남 진주 지방에서는 개천예술제라는 이름의 지역축제를 개천절날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34) 북한의 단군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정영훈, 「남과 북의 단군인식과 단군숭앙」, 단군학회(편), 『남북 학자들이 함께 쓴 단군과 고조선 연구』(지식산업사, 2005), 192-203쪽 참조.

35) 재외동포사회에서는 한반도 밖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70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노고를 기

IV.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와 제도화 과정

단군민족주의가 국가의 제도 속에 반영되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또 다른 사례로 홍익인간 교육이념이 있다.³⁶⁾ 이 홍익인간 역시 단군신화에서 유래한다. 현존하는 문헌 가운데 홍익인간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등 2종뿐이다. 조선조의 문헌에서 홍익인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조선조의 지식 세계가 유교 일변도로 일색화한 가운데, 단군의 건국과정을 서술함에 있어 환인과 환웅에 대한 얘기는 제거하고 단군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적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단군신화에 의하면 홍익인간은 환인과 환웅의 이념이었는데, 단군의 탄생과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환인·환웅과 함께 홍익인간까지 제외되게 된 것이다. 아무튼 홍익인간을 언급한 두 사서 중 『삼국유사』의 단군건국기사를 우선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옛날에 환인(제석)에게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의 일에 뜻을 두고(數意天下) 인간세상을 탐하였다(貪求人世). 아버지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가히 홍익인간(弘益人間)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가 다스리게 하였다(遣往理之). 환웅이 삼천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 신시를 세우니 곧 환웅천왕이다. 환웅은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 등 인간세상의 360여가지 일을 주재하면서 세상에 머물며 다스렸다(在世理化). 뒤에 환웅이 용녀와 혼인하여 단군왕검을 낳았고, 단군이 중국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평양에 도읍하고 조선을 세웠다.³⁷⁾

리고 모국과의 연대결속을 기하자는 취지하에 재외동포의 날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는데, 한국정부는 그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서 2007년에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기념일을 언제로 할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던 바, 그 중에는 민족의 생일날에 해당하는 개천절 10월 3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정부가 10월 5일로 정한 것은 그날이 민족 차원의 기념일들인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의 중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36) 이 장의 내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정영훈, 「홍익인간이념과 21세기 한국」, 『단군학연구』, 2호(2000); 정영훈, 「홍익인간이념의 유래와 현대적 의의」, 『홍익인간이념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7)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古朝鮮,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 開國號朝鮮 與高同

건국과정에 대한 『제왕운기』의 서술은, 환웅이 용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는 것이 아니라 환웅이 손녀를 檀樹神과 혼인케 하여 단군을 낳는 것으로 되어있는 등 『삼국유사』와 약간 다르다. 그러나 하늘의 혈통을 계승한 단군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는 것으로 적는 데는 차이가 없으며, 특히 홍익인간에 대한 언급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이들 두 사서에서는 모두 하느님 환인이 지상세계(신사)를 개창함에 있어 고려했던 조건이자 목적이 바로 홍익인간이었던 것으로 적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왕운기』에서는, 상제 환인이 환웅에게 지상(삼위태백)에 내려가서 홍익인간 할 것을 이르고, 그 같은 환인의 명에 따라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적음으로써,³⁸⁾ 환웅이 땅으로 내려온 목적이 홍익인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환인과 환웅의 이 같은 홍익인간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단군의 조선건국에서도 계승되었을 것으로 이해되며, 홍익인간이 건국이념이라고까지 인식돼온 것은 이 같은 유추에 토대하고 있다.

신화내용 속에는 이 홍익인간이 하느님 환인이 가지고 있던 이념으로 나와 있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궁구해보면 이는 상고인들이 공동체 및 삶의 모습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소망했던 바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바람직한 사회·국가·정치·인생의 모습에 대해 고조선인들이 갖고 있던 염원과 요구를 환인·하느님의 이름을 빌어 천명한 것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염원은 오랜 기간 단군사회와 결합하여 전해져오다가 일연과 이승휴에 이르러 두 사서에서 보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 홍익인간 용어는 고유적인 관념을 한자를 빌어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홍익인간을 일연이나 이승휴에게 전해준 「고기」나 「본기」는 유교나 불교 같은 외래종교의 영향 아닌 조선 고유의 정체성에 집착하는 선가계의 문헌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전한 단군신화와 홍익인간 역시 고유적 전승에 토대한 것이리라 생각한다.³⁹⁾

時.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白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孕生子 號曰壇君王儉…都平壤城 始稱朝鮮…御國一千五百年.”

38) 『帝王韻紀』, 卷下 前朝鮮紀, “本紀曰 上帝桓因有庶子 曰雄云云 謂曰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歟 故雄受天符印三箇 率鬼三千 而降太白山頂 神壇樹下 是謂桓雄天王也.”

39) 홍익인간은 일연이나 이승휴 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기」와 「본기」 같은 선가계로 추정되

홍익인간(弘益人間)은 문면대로 보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나 ‘크게 인간을 돕는다’로 번역할 수 있으며, 정치적·윤리적으로 인간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해석의 여지를 풍성하게 제공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홍익인간은 우선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지극한 인본주의 사고의 표현일 것이다. 그것은 내세 아닌 현세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현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민본주의·민주주의와 통할 수 있고, 평등과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주의 쪽으로도 열려있다. 윤리적으로는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촉구하는 이타주의윤리관으로 전개될 수 있다. 고유의 이념이라는 속성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민족적 경계를 넘어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사해동포주의로도 나아갈 수 있는 열린 사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기술된 홍익인간은 이후 600년 이상을 잊혀져 있었던 것 같다. 조선조를 통하여 1900년대 초까지 홍익인간을 거론한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단군관계인식을 주도한 흐름으로 상정되는 『규원사화』(1675) 등의 선가계 사서에서도 거론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말의 신채호 같은 민족주의사학자들에게서도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이들 사학자들에게는 단군의 자손으로의 민족정체성을 시급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 관심사였지만, 그러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까지 주목하지는 않았다. 단군을 종교적 숭앙대상으로까지 승격시킨 대종교도 초기에는 홍익인간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신사기』라는 경전에서 환인·환웅·단군의 사적을 기술하는 가운데 ‘弘益人世’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교리사상의 차원에서 홍익인간이 부각되지는 않았다 할 수 있다.⁴⁰⁾

홍익인간은 1920년대의 신민족주의자들에게 와서야 본격적으로 주목되고 인용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과제는 사상적·계급적 대립을 통합할 민족적 지도이념을 정립하는 것이었는데, 조소앙과 안재홍, 정인보 같은 신민족주의 사상가들은

는 고대 사서에 포함되어 있던 관념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홍익인간 용어가 불교와 전혀 인연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불교와의 연관을 가정한다 해도 불교의 영향 하에 홍익인간 이념·관념이 비로소 형성·편입되었다고 얘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문에서 얘기한 고유적인 정서와 요구 내지 유사전승이 먼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0) 나철이 남긴 문건이나 『삼일신고』·『신리대전』·『회삼경』 같은 다른 경전에서도 홍익인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다.

외래사상 아닌 토착적·고유적 유산 속에서 통일민족국가의 지도원리를 찾고자 하였으며, 그들에 의해 발굴된 고유의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이었다. 이들 신민족주의적 국학자들은 홍익인간 이념을 사상적·계급적 대립을 통합하여 통일민족국가를 성사시킬 수 있는 지도원리로 재해석하고 이 이념을 일반에게 적극 보급하였다.

우선 조소앙은 홍익인간을 통일국가건설과 세계일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 공리라 규정하고, 홍익인간을 특히 균등사상의 측면에서 해석하여 그의 삼균주의 정치이론의 사상적 토대로 삼았다.⁴¹⁾ 안재홍도 홍익인간 이념을 다사리·만만공생·대중공영·민주주의·민생주의 같은 현대적 정치원리로 재해석하여 ‘새시대 창건의 지도원리’로의 신민족주의이론의 한 기둥으로 삼았다.⁴²⁾ 정인보도 홍익인간을 우리민족이 인간세계를 열고 나라를 세운 최고의 준칙이었으며 ‘조선의 조선됨이 그 근본되는 연원’이자 ‘겨레의 굿대되는 정신’이라 강조하고, 공익을 사적 이익에 앞세우던 홍익인간의 전통을 잊고 실천하지 않은 데서 망국이 초래되었다고 설파하였다.⁴³⁾

이 홍익인간이 한국교육의 지도이념으로 처음 채택된 것은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교육문제를 자문하던 조선교육심의회에서였다. 이때 교육이념으로 선택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백낙준과 안재홍이었다. 그 중에서도 홍익인간 이념을 맨 처음 제안한 것은 백낙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는 홍익인간 이념은 그 유래가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보다 훨씬 옛적부터 전해온 것이며, 우리민족의 이상을 가장 잘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하였다.⁴⁴⁾ 백낙준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면서 미국식 교육을 받은 그가 홍익인간 이념을 강조했다는 것은 해방 후 시기만 하여도 단군민족주의가 종교를 초월하여 공유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⁴⁵⁾ 이들의 주도하에 조선교육심의회 제4차 전체회의(1945.12.20)에서는 교육의

41) 조소앙의 삼균주의이론과 홍익인간사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영훈, 「조소앙의 삼균주의 정치이론과 단군민족주의」, 『한민족연구』, 3집(2007); 권성아, 『홍익인간사상과 통일교육』(집문당, 1999), 49~57쪽 참조.

42) 안재홍,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민세안재홍선집』(2)(지식산업사, 1981).

43) 정인보, 「조선사연구(하)」, 『담원 정인보전집』(4), 182~184쪽; 정인보, 「丙子와 조선」, 『담원 정인보전집』(2), 363~369쪽.

44) 백낙준, 『한국교육과 민족정신』(문교사, 1953), 25쪽.

근본이념을 “홍익인간의 건국이상에 터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에 두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르게 된다.⁴⁶⁾

홍익인간 이념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이념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1949년 12월 31일 정식 공포된 「교육법」에서는 그 제1조에서 교육의 기본이념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케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이념으로 채택한 동기를 『문교개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란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 유교의 仁,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전인류의 이상이기 때문이다.⁴⁷⁾

앞에서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폈지만, 교육이념 제정 후의 현실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홍익인간 이념에 대해서는 그것이 교육이념으로 제정될 당시부터 거부움직임이 존재했었다. 홍익인간 이념을 공격해온 대표적인 세력은 공산주의자들과 서구주의자들이었다. 우선 마르크시즘의 계급중심적 유물사관에 편향된 공산주의자들은, 홍익인간을 과학 아닌 신화에 토대된 반동적인 관념이라 규정하고 ‘민주건국’이라는 시대과제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면 거부하였다.⁴⁸⁾ 미국

45)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제정될 당시 문교부장관직에 있던 안호상은, 홍익인간 교육이념은 범종파적·범이데올로기적 합의에 의해 채택된 것이며, 정부수립 후에도 큰 반대없이 교육이념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안호상, 『한미 안호상 20세기 회고록』(민족문화출판사, 1996), 248쪽.

46) 홍용선, 『광복후의 신교육운동』(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16쪽.

47) 문교부, 『문교개관』(1958), 4~5쪽.

48) 맑시즘 이론가이며, 해방 후 신민당의 당수를 지낸 백남운은 이 홍익인간 이념은 일제의 소위 ‘肇國精神’이라는 ‘八紘一字’와는 달리 중국문화 아닌 우리문화를 인용한 것이고 내용 역시 침략성을 내포하지 않은 평화적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긍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일제의 神勅이라는 ‘조국정신’의 한 유형으로 과학사상 아닌 신화전설에 근거하고 있는데다, 북고주의 반동사관에 토대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홍익인간 이념은 “현하 조선의 민주적 건국정신과는 본질적

과 서양으로부터 학문적·종교적 세례를 받은 이들도 홍익인간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홍익인간이 실증되지 않은 신화에 근거하고 있는 데다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포괄적 관념이라는 것을 못마땅해 하였으며, 홍익인간 이념을 강조한 입장의 배후에 존재하는 민족주의적 논리에 대해서도 그것이 편협한 자긍심을 형성하여 세계시민의식을 제약하고 독재정권에 봉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 같은 비판에 토대하여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홍익인간 이념을 다른 것으로 교체 하자는 논의가 계속 제기돼왔다.

해방 후 남한에는 정치·경제·군사·문화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가운데, 서구적·미국적 사고방식과 학문을 진리성과 객관성·합리성의 기준으로 상정하고 서구화·미국화를 근대화이자 진보요 발전으로 간주하는 풍조가 성장하였다. 그 같은 풍조에는 고유의 전통유산을 후진적인 것으로만 보아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편견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마치 중세기의 사대모화주의자들이나 근대기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배워온 지식·이론들을 상대적인 자리에 놓고 살피는 겸허함과, 고유적·전통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평가해주는 균형 감각이 취약하였다. 그러나 홍익인간은 그를 거부하는 반대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도 아직까지는 한국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남아있다.⁴⁹⁾

V. 단군민족주의의 제도화와 그 이후

해방 후 새 국가의 의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단군민족주의가 제도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무엇보다 건국 주도세력이 국가건설과 국민통합에 필요한 상징기제로서 이들이 가지는 의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같이 판단한 데는, (1) 단군민족주의가 대중적으로 공유되어 종교를 초월하여 호응을 받고 있었고, (2) 임정과 미군정기에 이미 단군민족주의의 제도화가 진전되었으며, (3) 제

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백남운, 「조선역사학의 과학적 방법론」(1946.7), 하일식(편), 『백남운전집』(4)(이론과 실천, 1991), 127~128쪽.

49) 홍익인간 교육이념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는 한명희, 「현대 한국교육의 이념적 쟁점과 과제」, 안귀덕(외), 『한국교육의 쟁점과 전망』(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42~50쪽을 참고할 것.

1공화국의 초기 정부에 단군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그리고 (4) 단군민족주의가 당시의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1)과 (2)의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당부분 설명됐다고 생각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3)과 (4)항에 대해서만 좀 더 보충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초기 정부에는 단군민족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대중교인들이 정부요직에 대거 초빙된 점이 그 한 사례이다. 제1공화국 정부 초기에 각원급 이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만 들더라도 이범석(국무총리), 안호상(문교부장관), 신성모(국방장관), 정인보(감찰위원장), 명계세(심계원장), 이시영(부통령) 등이 있다. 이승만정부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군정시기에 민정장관직에 있던 안재홍도 대중교인이었다. 단군민족주의자들은 해방 후 정국에서 대개 중도과진영에서 활동하였는데,⁵⁰⁾ 남북분단이 가시화되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남쪽에 잔류하여 대안을 모색하다가 상당수는 남쪽 단독정부에 참여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특히 초대 문교부장관에 임명된 안호상은 이승만 정부 초기에 지도이데올로기 역할을 한 일민주의를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교육문화부문의 제도와 틀을 정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물론 이같이 단군민족주의 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에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일제기를 통하여 민족운동에 헌신하였고 대중적인 신앙 또한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단군민족주의 의식을 공유한 주요 인사들은 단군민족주의가 제도 속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단군민족주의가 당시의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돼야 할 것이다. 제1공화국 초기 정부가 당면하고 있었던 과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로는 다양한 구성과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 구성원들을 새 국가의 하나의 정체성 밑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었다. 두 번째로는 일제기를 통하여 손상되고 상처받은 민족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살리는 일이었다. 셋째로는 사상적·계급적 분열을 극복하고, 특히 분단된 남과 북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었다. 넷째로

50) 단군민족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견지하는 계급주의 노선과 소련 추종경향에 반대하여 강한 반공적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민족통일과 민족정기확립에 대한 집착 때문에, 친일파를 적극 기용한 가운데 반공적 단독정권을 추구해간 극우세력과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정치노선에서는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민족국가건설을 지지하는 중도과노선에 경도되어 있었다 할 수 있다.

는 식민통치기간을 통하여 성장한 이기적 개인주의와 특히 친일·부일의 잔재를 극복하고 동포애와 공동체를 앞세우는 새로운 윤리적 기풍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었다. 다섯째로는 계급주의와 국제주의 노선에 토대하여 남북한 전체를 공산화시키려는 좌익의 기도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논리와 세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었다. 여섯째로는 한반도를 자국의 이익에 맞도록 질서 지우려는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의 의도를 경계하고 민족단위의 자주意識과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었다. 일곱째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인류사적 과제에도 동참해야 하였다.

이상의 과제들은 해방 후 한국민·한민족에게 부과된 과제이자, 건국주도세력들이 고민하였던 주제들이었던 바, 단군민족주의는 이들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답을 주고 있었다. 첫째로 새 국가에 대해 반만년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민족의 국가라는 의미를 부여해주고,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단일의 정체성을 부여해주어 국민통합의 요구에 부응해주었다. 둘째로 이들 단군민족주의적 상징의례들에 수반된 반만년의 자주역사에 대한 자긍심은 일제가 말살한 민족정체성과 자긍심을 부활시켜 주었다. 셋째로 이데올로기와 계급을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념을 제고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제고해주었다. 넷째로 민족적 공동운명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개인주의와 개별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상부상조하는 동포의식을 발휘하고 공동체를 앞세우는 윤리의식을 제고해주었다. 다섯째로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적화외도를 경계하는 반공의식을 제고하였고, 북한정권보다 민족적 정통성 차원에서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부여해주었다. 여섯째로 단군민족주의에 수반된 민족자주로의 지향은 주변 강대국과 외부정세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 관점과 자세를 일깨워주었다. 일곱째로 단군민족주의는 민족들이 공존공영하는 세계를 추구해왔으며, 특히 홍익인간 이념은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및 사해동포주의에 부합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단군민족주의가 국가의 제도의례 속에 영입된 것은 단군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지향들이 이 같은 과제에 호응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단기가 공용연호로 채택되고, 개천절이 국경일로 제정되며, 홍익인간이 교육이념으로 제정되는 과정을 살폈지만, 이들 외에도 이후의 현대사 속에 단군민족주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표출되거나 고취된 사례는 더 있다. 가령 교육현장에

서도 단군민족주의가 표출되었고, 특히 국사교육에서는 교과서편찬이 실증사학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단군민족주의가 일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⁵¹⁾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 등 단군관련 유적이 정부에 의해 역사유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된 것이라든지, 전국체전의 성화를 참성단에서 채화하고 있는 관례,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단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하여 보급시킨 것,⁵²⁾ 제헌절 기념행사 때 부르는 제헌절노래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제정을 단군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약속을 이룬 것으로 표현한 것⁵³⁾ 등도 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단군민족주의가 제도 속에 자리 잡는 과정과 배경에 대하여 살폈는데, 그러나 단군민족주의는 제도 속에 영입된 뒤 바로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현대 한국에서 단군민족주의의 활성화를 억지한 요인들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⁵⁴⁾

우선 단군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현대 한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갔다는 점이다. 일제기 이래 단군민족주의를 내부에서 공격했던 대표적인 세 세력은 기독교와 실증주의학풍, 그리고 공산주의였다. 기독교는 민족의 개화와 독립을 위하여 입신했던 초기의 지도자들이 퇴장하면서 점차 개인적 구복·구원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경전의 교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갔다. 그리고 그 같은 경향은 민족문화와 전통을 거부하는 편협성을 강하게 노정시켜갔고 단군숭앙에 대해서도 우상숭배라 하여 배척하게 되었다. 실증주의는 서구적 기준에 의해 정립된 이론을 진리성·객관성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단군민족주의류의 사고와 관점을 비합리적·비과학적이며 과잉의 애국심이 발로된 것이라 하며 배척하였다. 공산주의

-
- 51) 가령 1974년 국사교과서 국정화 조치 이후 편찬된 국사교과서는 실증주의적 관점에 토대하여 단군민족주의로부터 이탈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었지만, 단군과 고조선이 무시되는 데 대한 국민과 학계의 비판이 있는 후 개정된 1980년대 이후의 교과서들에서는, 단군의 영정을 신고 단군 건국의 역사를 한층 적극적으로 서술하는 등 변화를 보여주었다.
- 52) 단군의 표준영정 제작은 1973년 문화공보부에서 선현영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6인의 선현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표준영정을 지정할 때 단군이 그 1인으로 포함된 데서 비롯되었다. 문공부가 지정(1978)한 단군표준영정은 현정회가 주관하는 단군전에 봉안되었던 단군소상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국사교과서 등에 수록되어 보급되었다.
- 53) 제헌절노래의 1절은 다음과 같다.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 삼천만 한결 같이 깊은 언약 이루니 /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 54) 단군민족주의를 억지한 요인들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정영훈, 앞의 논문(2005a)를 참고할 것.

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국인의 민족의식의 연원이 되는 단군의 자손론을 배격하였다. 이들 세 세력은 해방 후 남과 북을 장악한 세력들이었다. 기독교는 남한에서 가장 유력한 종교집단이 되었고, 실증주의는 남한의 학계를 지배하였으며, 공산주의는 분단된 북쪽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냉전과 함께 심화되던 정신문화적 대외 종속 또한 단군민족주의를 약화시켰다. 정신문화 부문에서의 서구(미국)추종 경향이 증대되면서,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과 동일시되어 갔고, 그것은 근대화라는 국가발전과제와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서구중심적 세계관은 자주 지구촌이나 보편주의를 앞세우면서 자기의 편향성을 은폐하였으며, 단군민족주의를 종종 편협한 국수주의라 규정하였다. 이들 요인과 함께 우리사회 저변에 확산되던 이기주의·배금주의·향락주의 같은 ‘반공동체적’ 가치관도 단군민족주의의 운신을 억지하였다.⁵⁵⁾ 단군민족주의는 민족적 통합·결속·자주독립·발전이라는 지표와 함께 민족사회의 윤리적 정화·재건을 추구하는 지향성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단군은 일차적으로는 민족의 동질적 뿌리와 자긍심의 상징이지만, 그것에 수반된 동일혈연·공동운명의 관념은, 민족공동체를 개인적 이해에 앞세우는 이타·봉공·민족애의 윤리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해방 후 한국사회에 확산된 ‘반공동체적’ 윤리와 그 추종세력들은 민족을 거북한 주제로 간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같은 이해관계는 단군민족주의를 거부하는 대열에로 합류해갔다.

냉전과 함께 국내정치를 장악한 권위주의권력 역시 단군민족주의적 상징의례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냉전시대를 통하여 단군민족주의는 냉전과 권위주의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숨쉴 수 있었다. 그가 추구하던 통일지향 민족주의는 금지되었고, 동포애나 민족적 공동운명의식에 수반된 윤리적 공동체주의 역시 억지되었다. 냉전 권력은 단군민족주의를 반공과 반북 캠페인의 도구로만 활용하려 하였고, 권위주의 정권은 부족한 정당성을 보강받기 위한 방편으로 그를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권위주의 정권이 민족주체성이나 단군민족주의를 제기할수록 단군

55) 양승태 교수는 5·16 쿠데타 주도세력의 단기연호폐지 결정을, 민족정신사의 단절을 상징하는 사건이자, 한국경제가 세계자본주의체제로 편입이 심화되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자기존재의 역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순간의 욕망충족을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인 인간들이 다수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논평한 바 있는데[양승태, 앞의 논문(2007), 42쪽], 이 같은 언급은 단군민족주의가 처한 여건을 설명해주는 것 같다.

민족주의의 입지가 약화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반독재 민주화 세력이 단군민족주의에 비판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독재권력에 의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단군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적극적인 지지세력이 튼튼하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 해방 후 한국정치사의 비운과도 관련이 있다. 단군민족주의를 지지한 세력은 대개 중도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좌우익의 대결에 비판적이면서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민족국가를 추구하는 진영에 가담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후의 정국은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이 실패하고 서로를 부정하는 극좌·극우 정권이 남북에 들어서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남과 북을 장악한 세력은 단군민족주의와는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함께 하지 않는 세력들이었고 오히려 거북해하고 있었다. 남쪽의 경우 제1공화국 초기에 대중교계 단군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국가기초를 세우는데 기여하였지만, 그들 모두는 이승만 등 정계주도세력에 의해 기피되어 한국전쟁을 전후해서는 대부분 전면에서 축출되었다. 상당수의 단군민족주의자들은 전쟁 중에 납북되었다.⁵⁶⁾ 유력한 지도자들을 하루아침에 상실했다는 것은 단군민족주의의 침체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단군민족주의는 오늘날 하나의 기로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갖가지의 탈민족주의 세력과 이론들이 득세하면서 민족주의를 버려야 할 유산으로 배척하고 있고, 근대 이래 한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각성시키고 결속시켜온 단군민족주의에 대해서도 퇴장을 강요하고 있다. 민족주의 자체가 술한 도전에 직면해있기도 하다. 민족에의 소속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데다, 국내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는 등 국민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한국이라는 국가가 한민족이라는 민족과 분리되는 현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단군민족주의의 위기는 국가제도 속에 자리 잡은 단군민족주의적 제도의례들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미 단기 연호는 축출되었고, 개천절과 홍익인간 이념 역시 도전받고 있다. 그 존재의의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으며, 제도 속에 영입할 당시에 기대하였던 실질적인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한국의 지식사회가 이미 탈민족주의로 기울었다는 지적은, 단군민족주의적 제도의

56) 전쟁과정에서 납북된 지도급 단군민족주의자들(대중교인)로는 안재홍·조소앙·정인보·조완구·명제세·정열모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납북된 단군민족주의자들은 북한정권에 의해 통일전선의 외곽에 들러리로 이용될 뿐 현실정치에는 관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고대사연구 등 학계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이 1993년 이후 단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 역시 이들 납북된 단군민족주의자들이 북에 남긴 아이디어들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례에 대한 공격이 좀 더 강해지리라는 전망을 주고 있다. 단군민족주의적 제도의례의 존재이유는 종결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들 상징기제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 의의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지식사회에는 그러한 질문들도 던져져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논문은 그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로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다만 단군민족주의가 제도 속에 영입되는 과정과 배경 및 현재 상황에 대해 살피는 데에서 논의를 그치고자 한다.

VI.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개천절 국경일과 홍익인간 교육이념 및 단기 연호의 유래와 제정과정을 단군민족주의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들 제도의례는 한민족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와 관련이 있으며, 단군민족주의라 부를 수 있는 사조의 연장선상에서 국가제도 속에 영입되었다. 단군민족주의가 제도 속에 편입된 것은 무엇보다 정부수립기 주도세력이 국가건설과 국민통합에 필요한 기제로 이들이 가지는 의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이 단군민족주의가 대중적으로 공유되었고 종교를 초월하여 호응을 받고 있었다는 점과, 그에 토대하여 이미 임시정부와 미군정 시기부터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 제1공화국의 초기 정부에 단군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단군민족주의가 당시의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더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도세력들은 새 국가의 구성원들을 하나의 정체성 밑에 통합해야 하였고, 일제기를 통하여 손상된 민족자존심을 복구해야 하였으며, 계급주의적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과제와 함께 공동체윤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요구들에 단군민족주의가 호응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도 속에 영입된 단군민족주의는 건국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결속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군민족주의가 제도화되는 과정은 포스트모던의 이론들이 제기하는 ‘전통의 창조’(Invention of Tradition)나 ‘국민만들기 기획’ 같은 개념으로⁵⁷⁾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연호나 개천절·홍익인간 이념 등도 역시 국가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공고한 통합을 기하자는 취지하에 신화와 역사 속에서 찾아진 상징의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홉스봄 등의 제기하는 개념을 단군민족주의의 제도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 홉스봄이 말하는 ‘만들어진 전통’의 개념 속에는 정치권력이 권력을 강화하고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단군민족주의에는 그 같은 조작이나 기만적 의도는 찾아지지 않는다. 제도화를 주도한 주역은 권력자나 국가라기보다는 민족주의적 열정에 충만한 민간의 지사들이었고, 국가에 의해 영입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대중의 동의하에 민족 수준에서의 관행이 존재해왔다. 또 한국에서의 민족은 근대에 와서야 Nation이 형성된 서구와 다르며, 단군민족주의의 기제들은 민족단위의 역사의식·민족의식에 수반하여 오랜 기간 전승되며 정비되어 온 것들이었다. 물론 제도화까지의 과정에서는 일본 등 인접국가나 다른 나라들의 사례로부터 영향 받은 바도 컸을 것이다. 한국에서 단군민족주의가 제도화한 배경과 과정 및 기능들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적인 비교연구가 요청되는 것 같다.

오늘날 단군민족주의적 제도의례들은 적지 않은 도전요인들에 직면해있다 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하여 단군민족주의는 한민족의 민족적 각성과 공동체통합을 추구하면서 그 방향으로 공동체를 개혁해온 동력으로 기여해왔다. 그러나 역사 속에는 단군민족주의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들도 있었으며, 단군민족주의는 이들 적대세력들로부터 견제와 공격을 받아왔다. 전근대시기에는 중국 중심 천하관에 침닉된 사대모화사상과 차별적 지배질서로부터 공격받았고, 근대로 와서는 계급주의 세계관을 앞세운 공산주의나 서구문화지상주의적 사조로부터 공격받았다. 서구의 학술을 객관성·합리성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과학주의·실증주의의 학술사조 역시 단군민족주의를 공격하였다. 민족이나 윤리·이념보다 현실적 이익과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사조나,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사조들도 이를 불편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자처하는 다양한 사조들이 민족주의를 공격하는 연장에서 단군민족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구촌을

57) 에릭 홉스봄(외)/박지향·장문석(역), 『만들어진 전통』(humanist, 2004); 이성시(저)/박경희(역), 『만들어진 고대』(삼인, 2001). 에릭 홉스봄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오랜 전통이라고 강조해온 국가적 의례와 상징들이 실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국가권력의 주도하에 창조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운위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를 주창하는 쪽에서도 민족의 과잉을 말하며 탈민족의 새로운 정체성정립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세 도전과 공격들에 대해 대답하는 데로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다만 단군민족주의를 국가제도 속에 영입할 때 갖고 있던 과제의 상당부분은 아직 미결상태에 있고,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또는 민족 수준의 통합 기제가 달리 찾아지는 것이 없으며, 적대세력과 비판론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대안들이 아직은 부실하고 불안하기만 하다는 점 정도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나 지구촌이 주장되는 시대에도 민족정체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남북분단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지역간·계층간의 갈등도 상존하고 있다. 개인주의·이기주의가 범람하고 있지만, 그를 넘어서서 공동체와 사회적 연대로 나아가게 하는 도덕적·문화적 장치들은 빈약하기만 하다. 민족 또는 민족주의가 아직 세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유용한 한 단군민족주의의 장치들은 존재이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탈민족론자들은 민족주의가 배제와 억압의 기제로 작동해왔다고 주장하지만, 단군민족주의가 보여 온 역사에서는 그 같은 부정적 현상은 잘 찾아지지 않는 것 같다. 단군민족주의나 그에서 유래하는 상징기제들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연구와, 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 및 모색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민족은 개개인의 이기본능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연대와 복지를 도모해야 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인류의 지성이 발견해낸 매개가치 중 하나이다. 민족을 불편해하는 탈민족주의적 세력과 지향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가지는 의의와 영향력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신화가 공유되는 범위 안에서만 실체로서 존재한다.

참고문헌

-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태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예종실록』;
 『규원사화』; 『추강집』; 『매월당집』; 『순오지』; 『무당내력』; 『국역 병와집』.
 <<독립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담원 정인보 전집』.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 권성아, 『홍익인간사상과 통일교육』. 서울: 집문당, 1999.
- 김교현, 『신단실기』. 서울: 한뿌리, 1987.
- 김성환, 「고려시대단군인식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편), 『단재신채호전집』.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대중교통본사, 『대중교통광60년사』. 1971.
-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색인』. 1970~1980.
- 문교부, 『문교개관』. 1958.
- 백낙준, 『한국교육과 민족정신』. 서울: 문교사, 1953.
- 삿사미즈아키(佐佐木昭), 「한말·일제시대 단군신앙운동의 전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서영대(편), 「단군관계 자료」. 「단군관계문헌자료연구」. 윤이홍(외),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4.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編), 『민세 안재홍 선집』. 서울: 지식산업사, 1981.
- 양승태, 「단기 연호와 통일」. 『한국정치학회보』 41집 2호, 2007, 25~46쪽.
- 양승태, 「연호와 국가정체성: 단기연호 문제의 해명을 위한 정치철학적 논구」.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2001, 29~45쪽.
- 에릭 홉스봄(외)/박지향·장문석(역), 『만들어진 전통』. 서울: humanist, 2004.
- 이강오, 「단군신앙 총론」. 『전북대논문집』 10집, 1968, 9~54쪽.
- 이성시(저)/박경희(역), 『만들어진 고대』. 서울: 삼인, 2001.
- 정영훈, 「조소앙의 삼군주의 정치이론과 단군민족주의」. 『한민족연구』 3집, 2007, 135~158쪽.
- 정영훈, 「한국사 속의 ‘단군민족주의’와 그 의미」. 윤내현(편), 『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 서울: 지식산업사, 2005a.
- 정영훈, 「남과 북의 단군인식과 단군숭앙」. 단군학회(편), 『단군과 고조선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2005b.
- 정영훈, 「민족통일운동과 단군민족주의」. 『단군학연구』 11호, 2004, 271~301쪽.
- 정영훈, 「단군민족주의의 전사」. 『단군학연구』 8집, 단군학회 2003, 145~185쪽.
- 정영훈, 「홍익인간이념과 21세기 한국」. 『단군학연구』 2호, 단군학회, 2000, 171~197쪽.
- 정영훈, 「홍익인간이념의 유래와 현대적 의미」. 『홍익인간이념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정영훈, 「규원사화에 나타난 민족의식」. 『정신문화연구』 39호, 1990, 141~169쪽.
-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삼군주의연구논집』 9집, 삼군학회, 1987.
- 村山智順(저)/최길성(역), 『조선의 유사종교』. 대구: 계명대출판부, 1991.
- 하일식(편), 『백남운전집』.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근현대사자료총서8』. 서울: 선인, 200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0.

한명희, 『현대 한국교육의 이념적 쟁점과 과제』. 안귀덕(외), 『한국교육의 쟁점과 전망』.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홍웅선, 『광복후의 신교육운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국 문 요 약

이 논문에서는 개천절 국경일과 홍익인간 교육이념 및 단기 연호의 유래와 제정과정을 단군민족주의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들 제도의례는 단군의 건국과정을 전하는 한민족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로부터 유래하는 것들이다. 단기연호는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시간을 기산하는 연기법이고, 개천절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기념일이며, 홍익인간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할 때 갖고 있던 이상이었다.

단군민족주의는 한민족을 단군의 자손이라 보는 정체성인식에 토대하여 민족적 결속과 자주독립 및 발전을 추구하던 일련의 사상·의식·운동을 가리키는 말인 바, 단군신화가 제시하는 민족정체인식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이래 70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 속에 존재해 왔으며, 한말 이래 대중화하여 한민족의 민족의식 각성을 주도하였고, 자주독립과 통일민족국가 형성을 추구하는 민족운동의 동력으로 기여하였다. 해방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단군민족주의는 국가의 제도의례 속에 영입되게 되는데, 개천절 국경일과 단기연호, 홍익인간 교육이념 등이 그것이다.

단군민족주의가 제도 속에 편입된 것은 무엇보다 정부수립기 주도세력이 국가건설과 국민통합에 필요한 기제로 이들이 가지는 의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단군신화에서 유래하는 상징장치들이 국가의 제도 속에 자리잡는 것은 단군민족주의운동의 주요 성과라 꼽을 수 있으며, 단군민족주의의 제도화라는 차원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 투고일 : 2008. 9. 29.

● 게재확정일 : 2008. 11. 28.

● 주제어(keyword) : 단군민족주의(Dangun-nationalism), 단군신화(Dangun-myth), 단기연호(Dangi), 개천절(GaecheonJeol), 홍익인간(Hongikingan Ideology), 고조선(Old Joseon), 단군(Dangun), 한국민족주의(Korean nationalism).